

## 주택건설촉진법 입법 예고

- (주요 내용)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, 2000년 3월중에 시행될 예정임
  - (주택 사업자 요건 완화) 건설업자가 아닌 주택 사업자의 경우에 주택 건설 사업을 자체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의 기술 인력 4인 이상 확보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,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
  - (원활한 주택저당채권 발행) 국민주택기금 대출 자산을 액면 매각, 할인 매각, 할증 매각 등 다양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금리에 따라 신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. 또한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 매각토록 하여 대출 채권의 유동화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조성이 확대되도록 함
  - (중소형 주택 건설 촉진) 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세대 수 기준으로 50% 이상 건설하는 경우,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
  - (조합주택 건설 활성화) 주택조합의 가입 자격을 종전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60㎡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까지로 확대하여 서민들이 중형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
- (평가 및 문제점) 주택 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, 주택저당채권(MBS)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
  -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금리는 국고채 수익률(약 8.9%)을 기준으로 8.5~10.56%인데, 은행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9.75%임
  - 따라서 MBS 발행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, MBS 발행의 애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
  - 또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 중저소득층의 주택 마련이 여전히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

(곽용선 주임연구원 [yskwak@hri.co.kr](mailto:yskwak@hri.co.kr) ☎ 724-4058)

**최근 주요 정책(2000. 1. 31 ~ 2. 13)**

<p><b>'2000년도 규제개혁 64기 중점 추진 과제' 확정 발표</b></p>	<p>규제개혁위원회 (2.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코스닥시장: 등록전 유·무상증자 100%이내 제한 폐지, 등록 후 매도기간에 제한 부여</li> <li>~ 대기업 관련 규제의 통합·정비 및 특별법 제정 추진, 지주회사 설립요건 등 중복성 규제 개선,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사기준 구체화, 금융업 겸업 허용범위 확대 등</li> </ul>
<p><b>산업기반자금 조성 규모 및 운용 계획 발표</b></p>	<p>산업자원부 (2.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올해 3,860억 원의 자금을 조성, 연리 7.5%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시설고도화 및 운전자금을 융자할 계획</li> <li>~ 부품·소재산업에 700억 원(신규 책정), 지식기반 제조업 300억 원, 지식기반 서비스업 150억 원,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400억 원</li> </ul>
<p><b>해외 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방침</b></p>	<p>재정경제부 (2.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해외 현지법인의 운영실태,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의무화할 방침</li> <li>~ 이는 내년부터 해외 직접투자가 완전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사후감독기능의 강화 차원임</li> </ul>
<p><b>인터넷사이버쇼핑몰(전자상거래) 표준약관 마련 발표</b></p>	<p>재정경제부 (2.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약관의 명시 및 개정 사전공지, 20일 내 교환·환불, 주문 수신 확인 통지,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전송시 과태료 부과 등</li> <li>~ 서비스 중단, 개인정보 유출, 배송차질 등의 경우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</li> </ul>
<p><b>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</b></p>	<p>건설교통부 (2.9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내년부터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 내지 인·허가한 공공기관은 부실벌점제도 의무화(현재 임의규정)</li> </ul>
<p><b>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, 4월부터 교차보증 금지</b></p>	<p>공정거래위원회 (2.1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2개 이상 그룹이 서로 상대방 계열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해주는 교차보증 행위와 중첩적 채무인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</li> </ul>
<p><b>2000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확정</b></p>	<p>건설교통부 (2.11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1/4분기 10조 9,987억 원, 2/4분기 1,669억 원, 3/4분기 997억 원, 4/4분기 1,081억 원으로 배정, 1분기에 97%를 발주할 계획</li> </ul>
<p><b>5대그룹 회사채 보유한도 2월 중 폐지 계획</b></p>	<p>금융감독위원회 (2.13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~ 보유한도제 폐지 이후에도 펀드의 종목별 투자한도, 금융회사의 동일계열 신용공여한도, 거액여신 제공 한도 등이 적용돼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</li> </ul>

**주요 정책 정보(2000. 2. 14 ~ .)**

<p><b>2.17(목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(지역균형발전기획단) 지역균형발전 협의회 개최</li> <li>~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 수립을 포함해 균형발전의 주요과제 선정,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방법 등에 대한 총론이 다루어질 전망이다</li> <li>~ 또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촉진, 지역의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, 지역교육의 특성화 및 인사 재정제도 발전방안의 검토도 논의되어질 것임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---	---